

2025년 5월 27일 (화)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배포: 유도진(010-6260-7777)

문의처 : 국방안보위원장 / 상황실장 / 홍보담당

황인권(010-5279-1353) / 김대호(010-6383-9658) / 유도진(010-6260-7777)

문민 국방부장관 기용, 본질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12·3 내란사태 이후 군 통치와 군내 개혁 필요성이 급부상하면서, 국방부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자는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방부장관은 민간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자, 이를 두고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비법조인 대법관 시즌2”라고 폄훼하며 “민간 국방부장관 주장은 표 구걸을 위한 갈라치기”라고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 임명을 추진한 적이 없고, 당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도록 반대 의견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성 의원은 일부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추진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을 마치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 판결 업무에 있어 법학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는 전제 하에, 대법관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반면 국방부장관 임명은 군사작전만을 지휘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방정책과 인사, 자원의 배분, 안보 및 외교, 방위산업 개혁, 조직 운영 등을 총괄하는 행정부 장관직이라는 점에서 본질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의원은 이러한 차이를 애써 무시한 채, ‘비법조인 대법관 시즌2’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이재명 후보의 구상을 폄하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주장일 뿐만아니라, 헌법과 국제 사례, 안보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상대 후보를 헐뜯어 선거에 이용해 보겠다는 알박한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국민 여러분, 비군인 국방부장관 기용은 안보 공백이 아닌 안보 혁신의 시작입니다. ‘민간 출신 국방부장관 기용’ 제안은 단순한 인사 스타일의 변화가 아

나라, 12·3 내란 사태로 드러난 군의 정치개입 문제와 폐쇄적 조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 방향이자, 국방 문민화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첫째. ‘민간 국방부장관’이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군을 모르는 민간인 장관은 위험하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문민 국방부장관 체제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군정과 군령 기능은 구분되어 있고, 군령은 현역 장성으로 구성된 지휘부가 책임지는 구조이므로 장관이 민간이라 해도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한반도처럼 분단과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문민 국방부장관 체제는 군을 정치적 갈등에서 분리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민군 협업을 통해 대북 억제 및 안보 전략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둘째. ‘민간인 = 비전문가’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은 낡은 구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비전문가가 아닌, 비군인 출신의 안보·전략 전문가”로서 국방안보 분야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기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국방부장관은 대부분 비군인 출신의 전략가, 외교관, 행정가, 정책가 등 민간 전문가를 등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합 안보 시대입니다. 사이버전, AI전쟁, 국방 외교, 전략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군생활 30여년의 경력만으로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군 밖의 민간 전문가가 군 출신 인사보다 전략 통합과 정책 실행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비군인 = 국방안보 비전문가’라는 획일적·폐쇄적인 사고는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원리를 무시한 퇴행적 인식입니다.

셋째. 국방부장관은 전투지휘관이 아니라 국방전략 관리자입니다. 성 의원은 “국방은 고도의 군사 전문성을 요하므로 군 출신 장성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방부장관의 실질적 역할과 국방 수행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입니다. 군 작전을 담당하는 군령 기능은 합참의장 등 현역 군인이 주도하면서 장관을 보좌합니다. 국방부장관은 국방 행정, 군사력 건설, 국제협력, 조직 운영 전반을 총괄합니다. 군 출신이라 해도 외교·안보·방산 분야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며, 군 경력이 없더라도 학계·관료·연구자로서 국방 전문성을 쌓은 인물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민 장관도 작전기획 전문가들과 협업해 군사적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장관이 군 경험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방부 구조 개혁안은 장관 예하에 군정분야 차관과 군령분야 차관을 두어 국방부장관의 총괄적인 임

무수행을 보다 완전하게 보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선진국은 이미 문민 국방부장관 체계를 정착시켰습니다. 미국은 1947년 국방부 창설부터 민간인 장관 임명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예비역 장성 기용 시에는 전역 후 7년 경과 여부를 의회에서 엄격히 심사합니다. 일본은 헌법 제66조에 '총리와 국무대신은 모두 민간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NATO 국가들도 문민장관 + 군사작전 총괄 지휘부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군령(작전)은 현역이, 군정(정책)은 문민이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통해 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군 출신만이 국방부장관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에는 국방부의 문민통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 출신 장성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행이지 제도적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방문민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장관을 검토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즉, 군 중심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도개혁 요구는 오히려 오래된 숙제였던 셈입니다.

여섯째. 군 내부 개혁과 문민통제 강화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12·3 내란사태를 계기로 군의 정치개입 우려, 조직 운영의 폐쇄성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민간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 역시 그 상징적 조치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이슈가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진전이며, 군의 조직문화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 의원의 '비법조인 대법관 시즌2' 발언은 민간 국방부장관 기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을 가지고 본질을 흐리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부적절한 주장입니다. '비군인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은 안보를 약화시키는 실험이 아니라, 지휘체계의 효율성, 전투력의 질적 향상, 정책·외교 역량의 확대,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등 모든 측면에서 실질적인 안보 강화로 이어지는 전략적 선택이자, 미래지향적 안보정책의 비전입니다. 끝.